

중소 “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해야”

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개최
중소 법인 CEO 연령 60대 21.6%
승 위원장 “獨·日 등 제한요건 없어”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업 승계 지원제도에서 ‘업종변경 제한’을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상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꾸린 조직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 그리고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선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앞줄 왼쪽 4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리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선

적합하지 않다”면서 “기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부족해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 제도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승계 지원제도에서 ‘가업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업력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공제혜택을 받고 상속이 개시되면 이후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수(임금총액), 지분 등을 유지해야한다.

7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감소, 업종변경, 고용감소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송공석 위원장은 “기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기업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우량한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로 개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독일의 경우 기업승계시 업종제한이나 피

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없다. 상속인 요건도 필요없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업승계와 관련해 이같이 기업상속공제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함께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의 경우 창업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고령화가 곧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발전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19년 당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법인 최고경영자(CEO) 연령대는 60대가 21.6%, 70대 이상이 5.5%에 각각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기중앙회, 中企 ESG 동반성장 이끈다

중진공-IBK기업銀과 협약
업종별 솔루션 개발·공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과 잇따라 손잡고 중소기업 ESG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진공과는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경영 지원 MOU’를, 기업은행과는 ‘ES

G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중진공과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과 ESG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진공과 중기중앙회는 ▲탄소중립·ESG 선도사례(선도기업 육성, 선도 단지 구축) 발굴 ▲업종별 솔루션 개발

·공유 ▲정책 발굴 및 상호 연계 ▲조사, 연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올해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수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ESG진단 등 정책 사업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네이버 협업 속도 늘려 ‘빠른배송’ 안착

‘내일도착’ 서비스 안정화

CJ대한통운과 네이버가 ‘물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 고객에게 더욱 빠른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융합형 풀필먼트’를 통해 네이버와의 협업 속도를 높이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에 운영중인 곤지암, 용인, 군포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 올해 남사와 여주에 센터를 오픈했다.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풀필먼트는 다양한 셀러들의 상품을 센터에 입점시켜 공동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 복잡한 물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하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은 풀필먼트 센터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내일도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양사간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내일도착’ 서비스는 24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양사의 배송 협력 모델이다.

고객이 15시까지 주문해야 이튿날 배송하는 일반 택배 서비스와 비교하면 셀러들은 하루 판매시간 확대 효과를, 고객들은 배송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일도착’ 상품 카테고리 and 브랜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물동량은 전년보다 3.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매트리스 시장 진출... ‘에코 휴’ 출시

생활구독 기업 첫 발

SK매직이 침대 렌탈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를 통해 가전 렌탈기업을 넘어 생활구독 기업으로 본격 탈바꿈한다.

SK매직은 매트리스, 프레임 등 침대 렌탈 및 케어 서비스 ‘에코 휴(ECO Hue)’를 출시하고 매트리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홈 라이프 큐레이션 컴퍼니(Home Life Curation Company)로의 전

환을 선언한 SK매직은 건강과 편리, 친환경을 주요 가치로 매트리스 렌탈 및 케어 서비스 등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렌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K매직이 이번 선보인 ‘에코 휴(ECO Hue)’ 매트리스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최적의 수면 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동아 홈&리빙페어’서 소상공인협동조합관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32회 ‘동아 홈&리빙페어’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관을 운영한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매출 증대를 위해 설립한 영리 사업자 조직을 말한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SK엠앤서비스와 회원사 복지혜택

대기업 수준 종합 건강검진 우대

벤처기업협회가 SK엠앤서비스와 손잡고 회원사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벤처협회는 SK엠앤서비스와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 회원사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대기업 수준의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SK엠앤서비스는 370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기업맞춤형



벤처기업협회 장구성 회원사통분부장(왼쪽)과 SK엠앤서비스 김창현 제휴마케팅담당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복지물 ‘베네피아’를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같은 혜택으로 운영·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진실화해위 “1960년대 초 서산개척단, 강제노역 등 중대 인권침해 발생”
▲ 법무부, 임은정 ‘심층적격심사’ 대상에...위원회서 ‘퇴직 건의’ 가능 /사진 뉴스스

▲ 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행진 허용...“집무실, 관저 아냐”
▲ 5·18 불법 체포·고문당한 시민들 2심도 정신적 손해 인정



▲ ‘거리두기 해제 3주차’ 이동량, 코로나 전보다 더 늘었다 /사진 뉴스스
▲ 文 따라가던 방송 중계차, 고속도로서 후진 ‘뭇대’